

3500억 투자로 미래농업 혁신 선도 디지털 육종 등 14개 프로젝트 추진

농진청, '농업연구개발 혁신 방안' 고부가가치 농업 기술로 경쟁력 강화 권 청장 "민간 선도기술 적극 도입"

농촌진흥청이 미래농업을 촉진할 목적으로, 3500억 원대의 예산을 투입해 총 14개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 14개 부문은 '정책지원·현안해결 10대 프로젝트'와 '미래농업혁신 4대 프로젝트'로 나뉜다.

농진청은 이를 통해 우리 농업·농촌이 당면한 문제를 해소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권재한 농진청장은 18일 세종 농식품부 청사에서 "농업연구개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특히 "민간의 선도기술을 적극 도입해, 그동안 한계에 부딪혔던 농업문제를 민·관이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내년에 이 프로젝트에 올해 대비 617억 원 늘어난 3506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농업 주요 정책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하고 농업·농촌 당면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정책지원·현안해결 10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품종개발 전 과정을 전면 디지털로 전환할 계획이다. 내년에 59개 품목에 대한 (가칭)한국디지털육종플랫폼을 구축하고, 오는 2027년까지 각 품목별 핵심집단·유전체·표현체 등의 표준화된 육종정보를 플랫폼에 축적해 민간에 개방·공유한다.

또 데이터·AI 기반 스마트 농업 통합 솔루션 개발을 위해 내년에는 재배 환경과 작물생육 데이터 수집을 19품목에서 21품목으로 확대한다. 메탄저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이 18일 세종 농식품부 청사에서 '농업연구개발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감 유전자(gs3)를 보유한 세계 최초 저메탄 벼(밀양360호)를 내년에 품종출원하고 농가실증을 통해 후년부터 보급한다.

아울러 점차 심화하는 농촌의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발농업 기계화를 추진한다. 내년에 양파, 배추 정식기 등 7종 농기계를 우선 개발하고 2027년까지 무·고구마 수확기 등 4종을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다.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를 현재 110개 시군에서 전국 155개 시군으로 확대한다. 현재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기상재해·병해충·토양정보·가축사육기상정보 4개 시스템을 통합해, 원스톱 정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업인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여름철 배추 수급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종합대응기술을 현장에 보급한다. 현재 40일의 2배(80~90일)까지 늘릴 수 있는 농진청 개발 저장기간 연장 기술을 2025년 실증작업을 거쳐 후년부터 본격 적용할 예정이다.

국산 농산물을 식의약 소재로 개

발해 수입 원료를 대체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축산농가 생산비의 37% 수준인 사료비와 10% 수준인 인건비의 절감 기술을 조기 실용화한다. 우울감 및 인지기능 개선 등 다양한 효과가 있는 치유농업을 국민 서비스로 확대하여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한다.

10대 프로젝트에 더해, '미래농업혁신 4대 프로젝트'는 농업의 미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민·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다.

우선 농업위성·AI·로봇기술을 융합한 지능형 정밀농업 시스템을 구축한다. 식물과 가축의 생산성을 높이는 기능성 고부가마이크로바이옴과 농업용 플라스틱 제로화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또 고부가 바이오소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농생명공학과 합성생물학 등 첨단 바이오융합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개인맞춤형 식품, 대체단백질 개발 등 푸드테크 기술 혁신도 주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고용부 산하 공공기관 직무급 도입해야”

김문수 장관, 경영혁신 방안 논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지부진한 고용부 산하 공공기관의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을 촉구했다. 노동개혁 핵심 부처인데도 산하 기관의 직무급 도입 등이 지부진한 현실을 질타한 것이다.

고용부는 김문수 장관이 18일 정부 세종청사 고용부 대회의실에서 취임 후 첫 번째로 12개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고용부 장관을 비롯해 차관, 실·본부장, 대변인, 산하 공공기관 소관 국장, 감사관, 협조 요청사항 관련 국장, 그리고 산하기관장 등이 참석해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 혁신 방안과 경영평가 개선계획 등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고용부가 노동 개혁, 산업 안전, 일자리 정책의 핵심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산하 공공기관이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에 있어 노력과 실적이 부진한 점을 사례로 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과감하고 강도



높은 혁신을 요구했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이나 음주운전 등의 비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전체 공공기관의 직무급 도입률은 63.7%에 달하지만, 고용부 산하기관은 12개 공공기관 중 4개 기관만 직무급을 도입해 도입률이 33.3%에 그치고 있다. 직무급 도입은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에 따라 2022년 8월 이후 2년 이상 추진 중인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부 산하기관에서는 신속한 도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김 장관은 산하 공공기관에게 국민을 직접 만나는 민원 창구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 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kdh@

소 럽피스킨병, 경북 이어 전남까지 확산

농식품부, 출입 차량 소독 강화 요청

소 럽피스킨병(LSD)이 국내 9개 도(道) 가운데 6곳까지 확산했다. 올해 1~7월 기간 잠잠하던 LSD는 8월 경기에서 발생한 이후 충남·북도와 경북도 등으로 남하했다. 남부지방에서는 경북에 이어 지난 17일 전남에서도 검출됐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남 오후 전남 영암 소재의 한 한우농장에서 럽피스킨 양성분이 확인됐다.

이에 방역당국은 영암군 및 인접 6개 시·군(무안, 나주, 화순, 장흥, 강진, 해남)에 대한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 또 해당 지역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17일 오후 10시부터 19일 오후 10시까지 48시간 동안이다. 해당 농장의 감염 소에 대해서는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전라남도에서 럽

피스킨이 처음 발생한 만큼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서 집중유예 개체 백신 관리 및 매개곤충 방제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소 농가에서는 농장 위생 관리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 매개곤충 방제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했다.

럼피스킨병은 국내에서는 지난해 처음 확인됐다. 올해 들어선 지난 8월 12일 연중 첫 사례가 보고된 이후 이날까지 석 달 사이 총 20건이 발생했다. 중부지방 16건(경기 5, 강원 7, 충남 2, 충북 2), 남부지방 4건(경북 2, 대구 1, 전남 1)이다.

럼피스킨은 모기·침파리 등 흡혈곤충(감염충)이 옮기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증상으로, 피부 또는 점막에 작은 결절이 생긴다. 한편,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도 국내 농가에서 검출되기 시작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근로복지공단

예술인 고용보험 홍보

근로복지공단은 예술인이 직접 전달하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홍보영상을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는 예술인의 실업 보호와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12월 도입됐다.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제공하는 이 제도는 도입 이후 23만여 명의 예술인이 가입하며 프리랜서 직업예술인을 위한 유일한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예술인들은 자신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지 몰라 구직급여를 제때 받지 못하거나, 가입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한 사업주가 뒤늦게 신고해 과태료를 부담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예술인과 사업주들이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활발한 활동과 인상적인 연기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배우 유선과 유태웅의 재능기부를 통해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와 혜택을 소개하는 홍보 영상을 제작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국제표준 39종 개발 로드맵 공개

국표원, '반도체 표준화 포럼' 개최
첨단 패키징·전력반도체 등 개발

정부가 첨단 패키징, 전력반도체 등 차세대 분야 신규 국제표준 39종 개발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8일 서울 엘타워에서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반도체표준협회(JEDEC),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 등 반도체 분야 3대 국제표준화기구와 '반도체 표준화 포럼'을 공동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차세대 반도체 표준화 전략'을 발표했다.

차세대 반도체 표준화 전략은 지난 5월 발표한 '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략'의 한 분야로 2027년까지 첨단 패키징,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전력반도체 등 2031년까지 총 39건의 차세대 분야 신규 국제표준을 개발하고, 한·양국 및 JEDEC, SEMI와의 협력 등 글로벌 표준화 우호국 확보를 위한 계획을 담고 있다.

전략에 따르면, 첨단패키징 분야에

서는 반도체를 수직 적층하기 위한 3차원 패키징, 칩렛(Chiplet) 기반의 EMC/EMI 평가 및 재배선층 유전체 소재 특성 평가 방법 등 후공정 첨단패키징 분야 국제표준 5건을 개발한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선, 메모리 산업에 국한된 국내 반도체 산업을 탈피하기 위한 펄스초 레이저 다이싱, EUV용 포토레지스트 및 마스크 등 소재, 이종집적 방열소재, 초미세 공정용 원자층증착법 등 중소·중견기업의 소부장 기술 개발과 국제표준화 15건을 지원한다.

또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등 발전에 따라 초고전압, 초고주파에서 작동하는 반도체가 요구되는 바, 화합물 전력반도체 표준화 4건 개발을 추진하고, 인간 두뇌 신경세포 정보처리 방식을 반도체 기술로 모사한 AI(인공지능) 반도체용 신기술 뉴로모픽 반도체 국제표준화 7건, 질병 진단 및 치료 등 바이오산업에서 활용 가능한 바이오 반도체 국제표준 8건을 개발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KIAT “공공연구소·대학 기술 무상이전”

스마트제조·바이오 분야 357개 나눔

공공연구소와 대학 16곳이 보유한 스마트제조·바이오 분야 300여개 특허 기술이 중소기업에 무상 이전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18일 생산기술연구원 등 9개 연구소와 한양대 등 7개 대학 보유 기술 중 첨단로봇·반도체·헬스케어·보안 관련 기술 357개의 이전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신청을 내달 24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기술나눔은 대기업·공공기관 보유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무상이전해 사업화 기회를 주는 대·중소 동반성장 사업으로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올해 기술나눔에는 34개 기관이 참여한다.

KIAT는 이달 28일 오후 2시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대상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기술나눔 신청 방법 안내, 기술 제공기관과 나눔기술에 대한 1대1 상담을 진행한다.

나눔 대상 기술에 대한 상세 정보는 국가기술은행(www.ntb.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술나눔 신청 역시 장바구니에 해당 기술을 집어넣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민병주 KIAT 원장은 “기술나눔을 받은 기업들을 조사해 보면 매출 상승, 고용 확대, 개발기간 단축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기술 지도, 시제품 제작 등 기업에 대한 후속 지원 방안을 마련해 기술나눔을 받은 기업을 돕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